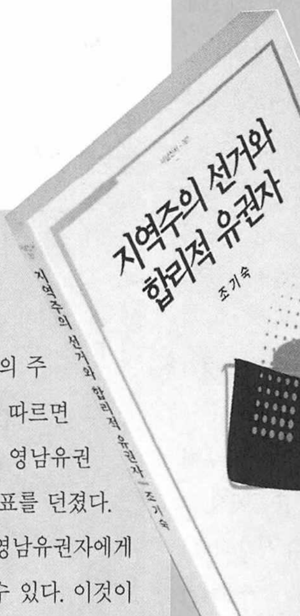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오해

신복룡 교수의 서평에 답한다

조기숙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학계의 원로이며 평소 존경하던 신복룡 교수가 졸저《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나남출판)를 평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서평이 나오게 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이는 필자가 전작《합리적 선택 :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 1996)에서 선택이론에 관해 소상히 논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책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딜레마(dilemma)를 '번민'으로 해석한 것을 '죄의식'과 동일시하는 등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논의는 무의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신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서평자의 분류에 문제 있어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은 형식주의(formalism)로서 기능주의적 설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설명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교수의 분류는 문제가 있다. 형식주의는 기능주의가 사건의 이면에 가려진 역동성을 간과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따라서 형식주의는 행위자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역사주의나 해석주의를 원용하며, 행위자에게 강요된 게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주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 형식주의를 설명하면서 역사주의와 구조주의를 도입한 흔적은 이 책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지역이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 고향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지만, 우리의 이익분배 구조가 고향에 의해 이뤄진다면 고향이 투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 서베이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이 원적인 영남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다. 이는 DJ정부의 '영남죽이기'가 영남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선호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적인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이익의 분배구조에 따라 고향이든 거주지든 어떤 것도 합리적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신교수의 주장처럼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 계산 없이 단지 찍기 싫은 역사적인 정서 때문이라면 선거의 종류나 시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정도로 지역주의 투표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역주의 투표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연역하고 이를 경험적 자료로 증명했다. 지역주의 투표가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87년 대선 이후라는 엄연한 경험적인 사실 앞에서 어떻게 지역주의가 합리적인 이익과 거리가 먼 정서와 혐오감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필자의 대안을 낭만적이라고 폄훼하고 이는 지배계급의 결심사항이라는 대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지역주의 투표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를 비난하고 교화하려는 언론인이나 학자를 비판하고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옹호하는 이유는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을 유권자에게 물어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구도를 고착화한 박정희 대통령, 이를 이용한 3김씨, 그리고 이에 편승해 지역주의를 전략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졸저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들이 지역차별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 따라서 유권자가 딜레마를 극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쾌거를 거둔 상황에서도 이런 제안을 낭만이라고 치부한다면 과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역사적인 정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비관론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총선은 계층투표가 강화된 경우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됐느냐는 것이 가장 첨예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경험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합자료를 통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계층투표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성과 계급성이 중첩돼 지역주의투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이론적 예측에서 도출됐다. 따라서 이런 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필자의 예측이 족집게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